

한라포커스 제주 분산에너지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 법적 근거 미흡 등 한계 봉착

도, 청정에너지 활용 전국 1호 특구 지정 추진  
 잉여전력 발생 시간에 사용하는 제도 확산 안돼  
 풍력으로 수소 생산 실증 성공... 활용처 못 찾아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출력 제어와 기존 에너지 시스템 유지로 인한 에너지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다.

연도별 제주지역 출력제어 추이 (제어횟수·제어량 MWh)는 지난 2015년 3회·152 > 2017년·14회 1300 > 2019년 46회·9223 > 2020년 77 회·1만9449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에너지 자립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섬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필요하다.

현재 통합발전소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편의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을 연말이 돼야 세부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는 석탄·석유 등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열·풍력 등 천연자원을 이용해 만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소비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하거나 남은 에너지를 저장·판매하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 시장 등에 거래하는 통합발전소(VPP) 제도 등을 실증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 특례 등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 지역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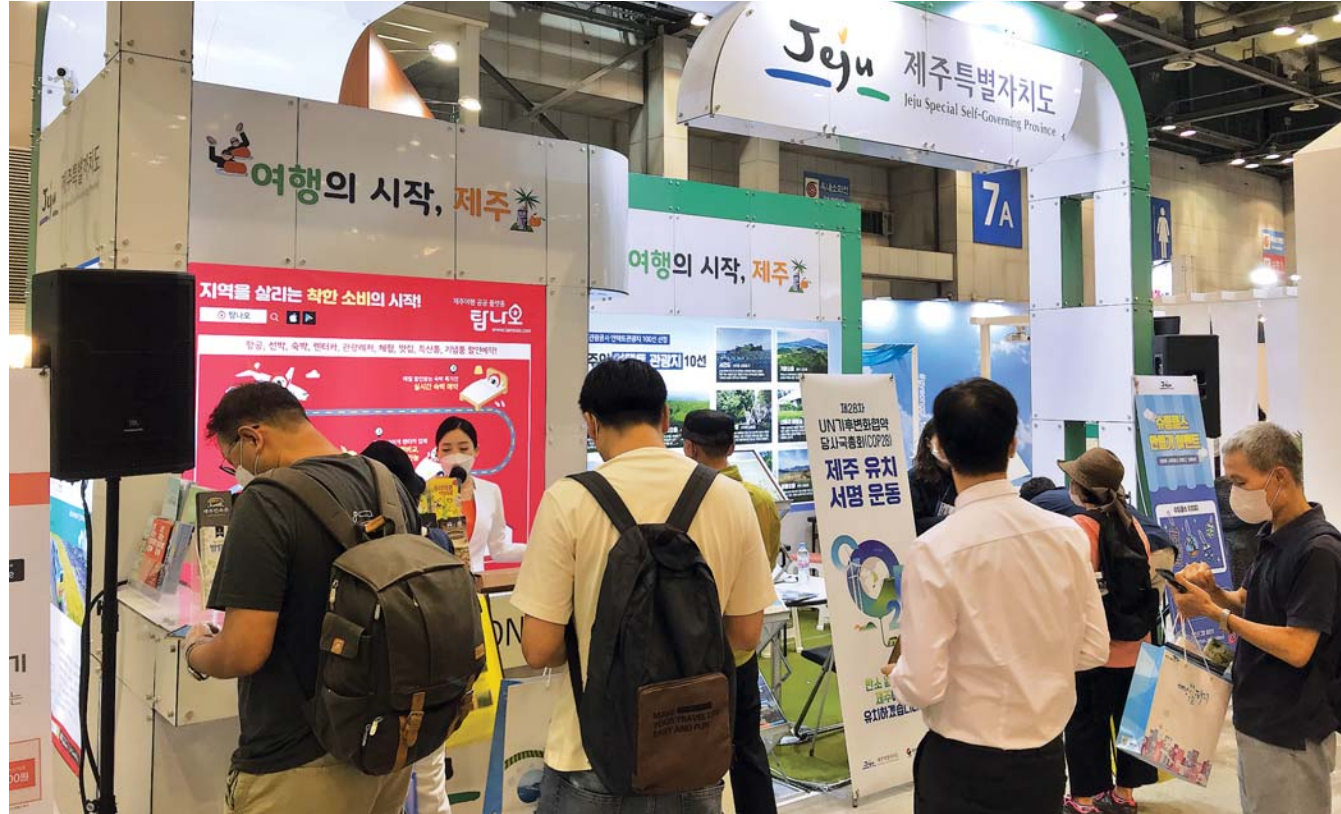
▶정부 사업 계획=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올해 제주에 150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에너지저장장치) 23MWh를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잉여전

력을 해소할 신규 유연성 자원으로,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P2G(전력→수소)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에서 실증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반응 제도(DR:Demand Response)를 도입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제주지역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플러스 DR은 잉여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1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예측·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ESS용량 요금 지급을 개선은 더딘 상태이다. ESS 충전시간(8시간)을 제외한 이외시간을 공급 가능한 용량으로 적용해 줘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잉여전력 발생이 예상되는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는 플러스 수요반응 제도는 홍보부족으로 확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2면으로 계속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제주관광홍보관'을 찾아 관광콘텐츠를 살펴보고 있다. 부미현기자

##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미래 준비”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9~12일 일산 킨텍스  
 도, '제주관광 홍보관' 운영... 언택트 관광 집중 홍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식을 갖고 12일까지 4일 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한라일보 등 전국 각 지역의 대표 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국내 95개 지자체와 해외국가 14개국, 그리고 일반 관광콘텐츠 기업 및 단체 등 총 179개 기관, 기업, 단체에서 313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비대면 온라인 요소를 가미했다. 박람회 기간에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유튜브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타이틀 아래 '대한민국 방방곡

곡 여행박람회', '아시아 스마트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KITS Travel Mart'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내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에 처한 국내 관광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참여 지자체들에게 관광 시장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협회도 제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관광홍보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제주 인택트 관광지와 온라인 제주여행 플랫폼 '탐나오'에 대한 집중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또 UN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제주도 캐릭터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제주관광 홍보영상물을 활용한 랜선제주여행과 함께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포털 비짓제주(www.visitjeju.net)와의 링크 연결 등을 통한 온라인 제주여행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홍보 부스를 열고 제주삼다수 앱 가입 시 여행용 파우치 증정 행사와 제주개발공사 SNS 채널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장수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 관광으로 가는 대전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방역 프로그램과 대책을 철저히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제주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선정돼

〈지능형교통체계〉

드론 통한 교통상황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2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ITS 국고보조사업은 도시부 도로의 교통 및 안전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려는 교통체계다.

국토부가 지난 7월부터 한달 간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8곳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원했다. 그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기대효과가 높은 광역지자체 5곳, 기초지자체 29곳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이 편리한 도로안전·교통 서비스'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교통사고, 국지적 기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을 통해 3차원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해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와 작동환경을 가상화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년 1월 교부할 예정이다. 강대해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2021 행정사무감사 10.13 - 10.26

###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살피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부당한 행정사례 없나?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 접수기간** '21. 9. 6. (월) - 9. 23. (목)
- 내 용**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
- 의견제출**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www.council.jeju.kr)  
 도의회 SNS, 우편, 직접 방문(해당 전문위원실)
- 문 의 처** 도의회 공보관 ☎064)741 - 2204